

#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이진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6.

발의의원 : 이진환, 조성대, 김동훈,  
박윤옥, 이정애, 박경원,  
원주영, 이수련, 정현미,  
김상수, 김지훈(민)

## 1. 제안 이유

도로의 신설·보수·굴착·교통시설물 설치 및 인·허가 시, 사전에 공사 구간·시행자·시행 기간 및 주요 내용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사전예고 적용 범위, 대상, 사항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.

(안 제3조~제6조)

다. 의견제출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, 제8조)

## 3. 제정 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## 5. 관련 법령 : 덧붙임

##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·보수 및 굴착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예고사항을 예고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사전예고”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.
2. “이해관계인”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,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중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시행 또는 인·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.

제4조(사전예고대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 또는 인·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.

1. 도로의 신설
2. 도로의 보수

### 3. 도로의 굴착

#### 4. CCTV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10미터 미만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

2.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

3.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

5.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,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

제5조(사전예고사항) ① 시장은 도로의 신설·보수·굴착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.

1.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

2. 공사구간

3. 공사의 시행자

4. 공사의 시행 기간

5. 공사계획의 주요 내용

6. 의견제출 방법

②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방법에는 기간, 제출처 등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전예고방법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, 현수막,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.

② 사전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의견제출) 이해관계인 및 의견이 있는 자는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5조제1항제6호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
제8조(의견조치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 공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6조(사전예고방법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 등에게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판, 현수막, 서면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.

### 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 첨부 사유

본 조례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.

- 도로공사 사전예고사항을 게시판, 현수막, 서면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.

### 4. 작성자

도로관리과장 진수용

○ 『도로법』

- 제19조(도로 노선의 지정·고시 방법 등)

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·고시는 관보에 하고, 제14조,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·광역시도,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·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·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노선번호
2. 노선명
3. 기점, 종점
4. 주요 통과지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- 제25조(도로구역의 결정)

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·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·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.

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·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, 위치,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

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,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26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

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·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, 도면,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고,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『도로법 시행령』

- 제24조(도로구역의 결정 등)

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

2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

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“사유, 위치,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

1. 도로구역의 결정·변경 또는 폐지 사유
2. 결정·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
3. 도로의 종류, 노선번호, 노선명, 기점·종점, 주요 통과지 및  
총연장

4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(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(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6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- 제25조(주민 등의 의견 청취)

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·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,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1. 도로구역을 결정·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
2. 결정·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도로의 명칭,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
3.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(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4.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

5.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
### ○ 『농어촌도로 정비법』

- 제9조(도로의 노선 지정)

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### ○ 『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』

- 제8조(도로의 노선지정공고) :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.

### ○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

- 제25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)

① 도시·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·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

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도서(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(기초조사결과·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①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제30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

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

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

①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

- 제90조(서류의 열람 등)

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,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: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(변경작성을 포함한다), 인가(변경인가를 포함한다),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